

“JY 외 후계자 누가 있나” ‘승계’는 특검이 만든 허구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④ 승계의 실제, 과연 있었나?

승계 작업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변호인단 “지분 확보, 의미 없는 행위”

2014년 5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굴을 비추는 일이 늘어났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세간에서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를 준비하던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 앞서 읽어볼 기업 관련 자료인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비서관들은 삼성에게 기업의 현안 등을 요청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택했고 경영권 승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결국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후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실 행정관은 “2015년 말씀 자료에 ‘삼성



2011년 4월 삼성 서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 이견희 삼성 회장(왼쪽)과 이재용 당시 삼성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란 구절이 있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란 구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는 자신이 아닌 운도 행정관이 작성한 문장이며 “운 행정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썼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핵심 현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으로서는 이견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

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말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박영수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상과제였고 재판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피고인들이 인정했음에도 재판

은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특검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은 이유로 삼성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견희 회장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회사 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장 역할을 물려받는 의미의 승계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선택됐을 때 완료됐으며, 이 회장 사후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삼성전자 지분의 51%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인만큼 이 부회장 개인의 지분 확보는 이미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승계 작업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 중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이라는 것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한 작업이고 의결권 손실 최소화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은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줄인다는 모순을 내포했기에 실존할 수도 없는 셈이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1심 논고문에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 스스로 개별적, 세부적 사안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와병 후 삼성그룹 안살림을 맡아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회장 취임을 수차례 권유했다”며 “본인이 때(임원과 주주들에게 삼성의 리더로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가 아니라며 고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회장 취임 같은 문제는 이미 이 부회장 자신의 결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100억 비자금 의혹’ 조현준, 검찰 출석

文정부 출범 이후 그룹총수 첫 소환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사 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랜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 배우 등 4명을 ‘탁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범종 기자 joker@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사진)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사에 앞서 비자금 조성 및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흥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원 ‘주 5일제’ 개편

월~금요일·화~토요일 2개 체계로

집배원의 근무체계가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체계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생활 균형정책에 힘입어 집배원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근무조로 편성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복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은 우정사업본부와 대표교섭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이날 광화문 우체국에서 적극 합의해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4개(대도시, 중소도

시, 농·어촌도시를 포함)의 우체국에서 운영된다. 현재 집배원의 근무체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획일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환제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 5일 근무체계가 정착되면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조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인턴기자 ryusou91@

작년 육아·가사 전담 남성 17만명... ‘역대 최고’

2003년 이후 최대... 증가 가속화 여성의 수 감소 양상 이유 ‘고령화’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으로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업 육아·가사 남성은 지난 2003년 10만6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2012년에는 각각 14만7000명, 14만4000명으로 줄더니 2014년에는 13만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5만명으로 증가로 전환한 후 2016년 16만1000명, 지난해 17만 명까지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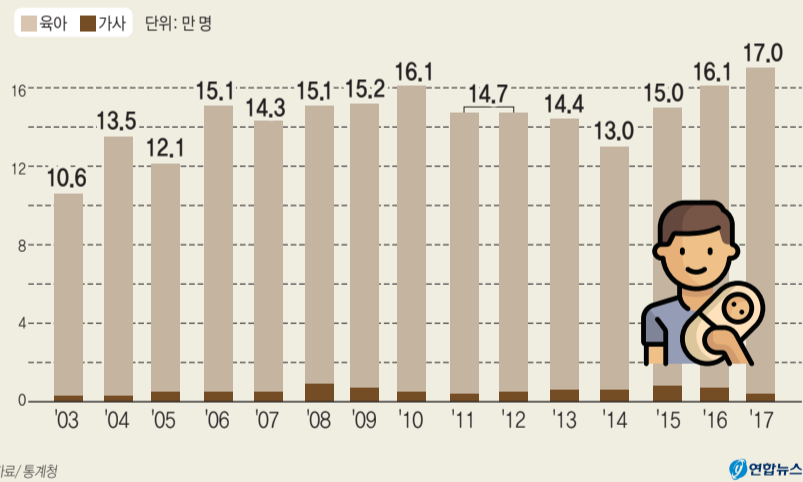
이같은 추세에 두드러진 특징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 없이 가사만을 전담하는 남성은 2015년 14만2000명, 2016년 15만4000명, 지난해 16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육아 휴직을 한다고 해서 가사나 육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며 “바깥에서 일하지 않고 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들에 한해서 관련 통계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성들의 가사·육아 활동

전업 육아·가사 남성 추이



자료/통계청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아빠 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에서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육아·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은 694만5000명으로 2015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육아·가사 여성의 수가 600만 명대로 되돌아간 것은 2009년 699만

9000명 이후 8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와 가사에 전담하는 남성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이유로 일단 고령화를 지목한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남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만혼·비혼 추세가 이어지면서 육아·가사로 빠지는 여성 30대가 노동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동시에 은퇴 세대 여성의 취업도 늘고 있다”며 “성 역할 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